

지역거점대학 육성으로 지역 성장 이끌어낸다

위기의 지역대학 활로찾기 <3>끝>

대학 배출 창업기업 중 약 80% 정착 전남대, 2년 연속 글로벌 대학 탈락 지산학연 혁신 네트워크 구축 시급

학령인구 급감으로 인한 지방대학의 위기는 비단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청년층 유출과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로 지방은 물론 지방 대학까지 위기에 처한 상황 속, 교육 혁신뿐만 아니라 지역 발전을 함께 이끌어갈 지방 거점대학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지역 고용학회가 공동으로 지난달 발매한 계간지 '지역 산업과 고용'에 따르면 대학에서 배출된 창업기업 중 약 80%가 동일 지역에 정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발 창업기업의 5년 내 생존율은 무려 86.3%를 기록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8.3%를 크게 상회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에서 배출된 창업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각각 12억 9600만 원과 12억8000만원으로 비슷한 성과를 보였다. 지역거점대학의 성장이 곧 청년층 유출을 막고 지역을 먹여 살리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수도권보다는 지방의 창업·혁신생태계

가 대학이 가진 공간과 자원에 더 많이 의존하는 구조로, 지역 대학이 기술이전과 공동연구에서 중요한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분석된다. 다만 수도권 대학발 창업기업은 연구개발(R&D) 지출이 비수도권 대학보다 약 2배 많았고 평균 매출액 증가율은 10배(비수도권), 15배(수도권)로 큰 차이를 보였다. 또 대학 간 특성화와 전문화가 부진하며, 규모가 큰 장기 연구는 지역 외부 산학연 주체와 연계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거점대학이 더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지역 내 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는 결론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광주·전남 지방 거점

대학인 전남대학교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전남대는 2년 연속 '글로벌 대학 30' 사업에서 탈락해 광주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전남대는 탈락 원인 분석과 교육부의 지적사항을 반영해 내년에 다시 지원할 계획이다. 또 우수 인재를 유치·양성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촉진하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해 지방 소멸의 위기에 대응하는데 근간을 마련하겠다는 포부다.

지방 거점대학이 제 역할을 해내기 위해서는 긴밀한 산학연관 구축은 물론, 지자체와의 긴밀한 혁신 네트워크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수기광주시의원은 "이제는 산학연이

아니라 '지산학연'으로, 글로벌과 RISE(지역혁신플랫폼)사업 모두 현안에 대해 지자체와 대학이 머리를 맞대야만 할 때다"며 "대학의 존재 이유는 연구와 인재 양성에 있는 것이지 지역 산업을 이끌만한 역량은 행정, 곧 지자체에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이상 광주시도 지금껏 관행대로 대학에만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된다"고 제언했다.

이어 "지역 인재 육성에 대한 중요성이 어느때보다도 대두되고 있는 시기다. 광주시는 이제 보조금을 주는 지원 사업성 역할이 아니라 대학과 손을 맞잡고 지역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정준호 의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전화방 운영' 2명 함께 기소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 불법 전화 홍보방 운영과 지인 자녀 채용 대가로 수천 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준호(광주 북구 갑·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준호 의원(44)과 A(50)씨, B(19)씨 등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정 의원 등 3명은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 경선 과정에서 경선 후보였던 정 의원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전화홍보방 12명에게 전화 1만5000여건과 홍보 문자메시지 4만여건을 발송하도록 지시한 뒤 대가로 52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A씨와 B씨를 포함해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6명에게 경선운동을 지시하고 이에 대한 급료로 1680만원을 지급하고, 190만원을 추가 지급할 것을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정 의원은 지난해 7월 인천 소재 건설업체 대표에게 자신이 당선되면 딸을 보좌관으로 채용하겠다고 약속하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정 의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정 의원 측 변호인은 "경선 과정에서 공천받기까지 가장 주효했던

전략은 다른 후보와의 단일화였고, 경선 선출이 유력해진 상황에 홍보방을 운영할 필요가 없었다"며 "선거캠프 관계자가 금품을 부당 지급한 사실도 추후에 알게된 사실이다"고 해명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악의적인 제보가 기소까지 이어지게 된 사건이고 받은 5000만원은 변호사 사무실 운영 경비가 필요해 빌렸다가 변제해 돈일 뿐 정치자금이 아니라는 것이 정 의원의 입장이다.

정 의원은 "보좌관 채용을 약속하기에는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고, 자녀 채용이 목적이었다면 수차례에 걸쳐 채무 변제를 요구한 것도 이치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A씨와 B씨 측도 각각 "불법 선거운동을 공모하지 않았다. (B씨의 경우) 대학교 1학년생이 아버지와 친분이 있어 선거운동에 자원봉사를 갓을 뿐 불법 선거운동을 공모할 위치가 아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검찰은 공소 제기 이후 잦은 정 의원의 법률 대리인의 변경으로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며 신속한 재판 절차 진행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부터 주 3회 재판 기일을 잡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방침으로, 다음 기일까지 정 의원을 비롯한 법률 대리인들에게 검찰의 증거 인정·부인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정 의원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11월 27일 오전 공판 준비 기일로 열린다.

민현기 기자

광주서 택시 추월하려다 음주사고 낸 20대 입건

차량 2대 들이받아... 7명 부상

새벽 시간대 광주 도심에서 연쇄 추돌 사고를 낸 20대 만취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30일 광주 서부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2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26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승용차를 몰던 중 차량 2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도시철도 2호선 공사로 차선이 좁혀지는 구간이던 해당 도로에서 앞서가

던 택시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했다가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에 놀라 급하게 방향을 틀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택시를 들이받은 후 반대편에서 오던 또 다른 승용차를 미쳐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으며 연쇄 추돌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A씨를 비롯한 운전자와 동승자 등 7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정성아 기자



광주 직업교육 박람회

2024 광주 직업교육 박람회가 3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시교육청 주최로 열려 학생들이 광주자연과학고 전공체험 부스에서 체험을 하고 있다.

김양배 기자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 '제3자 변제' 수용

양금덕 할머니 이어... 전원 수용 아들 '父 의사표시 어려운 상태' 시민단체 정부 위법적 강행 비판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인 이춘식(104) 할아버지가 양금덕 할머니에 이어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수용했다. 그의 장남과 시민단체는 이 할아버지가 정상적인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입모아 주장했다.

30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등에 따르면 이춘식 할아버지는 이날 오전 재단으로부터 대법원의 강제동원 확정 판결에 따른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수령했다.

제3자 변제안은 가해자인 일본 전범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국내 민간 기업이 출자한 돈으로 대신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춘식 할아버지는 1940년대 신일본제철의 전신인 일본제철의 이와테현 가마이시 제철소에 17세의 나이로 강제 동원돼

노역에 시달렸다.

이춘식 할아버지는 지금까지도 양금덕(96) 할머니와 함께 배상금 수령을 거부해 왔지만, 지난 23일 양 할머니가 배상금을 수령한 데 이어 이 할아버지까지 변제안을 수용하면서 생존자 모두가 정부해법을 받아들이게 됐다.

이 할아버지의 장남 이창환씨는 제3자 변제안 피해 배상 수용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친은 현재 노환과 섬망증으로 정상적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며 "판결금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을 뉴스를 통해 갑작스럽게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에 있는 형제들 일부와는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곧 누가 서명을 했고 누가 돈을 수령했는지 확인할 것"이라며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 단체도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 정부는 위법적 방

식을 통한 제3자 변제 판결금 강행을 멈춰야 한다"고 성토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민족문제연구소·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제3자 변제를 압박하기 위해 생존자들을 상대로 하는 탈법적 행위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앞서 제3자 변제를 수용한 양금덕 할머니의 경우 판결금 수령이 할머니의 의지에서 비롯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생존 당사자의 법률적 행사는 오직 당사자와 법률 대리인만이 할 수 있다"며 "정부가 고령의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지능력이 없는 상태인 것을 알면서도 법률 대리인을 제치고 위법적 수단을 통해 제3자 변제를 추진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헌법을 파괴하면서까지 일본에 손을 들어주는 윤석열 정부는 역사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준명 기자

진일보

@jnilbo

Kakao Talk : 진일보
E-Mail : jebo@jnilbo.com

진일보는 전남일보가 제공하는 뉴스서비스입니다.
한발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를 바랍니다.

